

헌법각론

3주차

이정덕 교수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I. 의의

1. 개념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법적 성격

-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나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법은 공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현에 관한 법일 뿐만 아니라 단체주의 공평부담의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행정주체의 배상 의무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공법이라 해야 하나,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II. 주체

- 국가배상청구권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이 그 주체가 된다.
- 이때 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7조).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구분	외국인	법인	국민
형사보상청구권	평등주의	부정	긍정
국가배상청구권	상호주의	긍정	긍정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상호주의	부정	긍정

Ⅲ. 내용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배상법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1) 공무원

- ① 공무원의 개념 :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사인으로서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무원인가의 구별은 신분에 의한 구별이 아니라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의 범위 : 판례에서는 공무원에 포함되는 자로서 시 청소차운전수, 소집중인 예비군, 집행관,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법원, 철도건널목의 간수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수, 공무집행에 자진 협력하는 사인 등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6.25사변 중 적과의 교전 중에 적군의 포탄에 맞아 부상한 경우 그 부상은 우리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1989.7.28, 89헌마61).

(2) 직무상 행위

- ① 직무상 행위의 범위 : 국가배상청구권을 성립시키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원이 사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를 제외한 권력행위와 비권력적 관리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법상의 행위는 국가가 사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이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 ② 직무상 행위의 개념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는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통설.판례). 즉,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피해자가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한다.
- ③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감방 내에서의 사형, 상관의 명에 의한 상관의 이삿짐 운반, 훈계권 행사로서의 기합, ROTC 소속 차량의 그 학교 교수 장례식 참석차 운행, 시위진압 중 전경이 조경수를 짓밟는 행위 등은 직무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 ④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직무행위로 보지 않은 것은 가솔린 불법처분 중 발화, 결혼식 참석을 위한 군용차 운행, 군인 휴식 중의 비둘기 사냥 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부정하였다.

(3) 불법행위

- 불법행위라 함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 및 관습법을 포함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과 같은 일반법적인 원리도 여기의 법령위반에 포함된다. 다만 공무원의 단순한 복무위반행위는 여기의 법령위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작위.부작위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대법원 판례는 '군.경.공무원이 3차에 걸친 간첩출현신고를 묵살하고, 즉시 출동하지 아니한 직무유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비에 의해 살해된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고 하였다(대판 1971.4.6, 71다124).

(4) 손해의 발생

-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손해발생과 공무원의 직무행위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한다.

(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

-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다르다.

2. 내부적 책임

- 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그 책임범위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실제로 공무원이 경과실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국민에게 배상한 경우라도 공무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3. 배상절차와 배상의 범위

- 배상청구는 소제기에 앞서 배상심의회 결정 거칠 수 있으나 배상심의회 배상결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되어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율 57.4%, 왜 그런지 보니...

SBS전형우 기자

입력 : 2020.06.27 21:09 | 수정 : 2020.06.27 22:36



<앵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보통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57.4%, 절반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급하게 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소방관들이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게 큰 이유로 꼽힙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나타난 차량과 부딪힙니다.

안에 있던 환자와 소방대원이 다쳤습니다.

환자를 옮기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급차 과실비율이 60%로 나왔습니다.

소방차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소방차의 과실이 인정된 비율이 88.5%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과속이나 앞지르기, 끼어들기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은 긴급차량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준한/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소방차량이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형사적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 등으로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데 불과합니다.

긴급 차량의 면책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긴급차량이 정지 신호에 걸리지 않도록 교통신호센터가 차량과 교신하며 신호를 바꿔주는,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범운영한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긴급 차량 출동시간이 최대 60%까지 단축됐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길 터주기와 양보운전이 병행돼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SBS전형우 기자

입력 : 2020.06.27 21:09 | 수정 : 2020.06.27 22:36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의 효력(헌재 1995.5.25, 91헌가7)**위헌**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에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력까지 부여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헌재 2009.4.30, 2006헌마1322)**합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규정이 없는 등 독립성이 보장되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된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배상의 범위 : 원칙적으로 가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국가배상법 제4조). 다만 재산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나 압류.담보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IV. 이중배상금지

1. 연혁

-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중배상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되자 제4공화국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과 현행 헌법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판례

이중배상에서 공무원의 범위(대판 1998.2.10, 97다45914; 대판 1997.3.28, 97다4036)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은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입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군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인으로 보는지의 여부 :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x), 공익근무요원(x)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이중배상금지(헌재 1996.6.13, 94헌바20)

합헌

향토예비군의 직무는 성질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공공적 성격의 직무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일반인들과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 임무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개별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자체로서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거나 향토예비군대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중배상에서 공무원의 범위(헌재 1996.6.13, 94헌바20)

합헌

헌법재판소는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경찰공무원의 개념을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으로 넓게 이해하여 전투경찰순경은 이중배상청구가 금지되는 경찰공무원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배상법이 향토예비군대원을 이중배상금지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I.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비교

형사보상청구권	무과실 손실보상	외국인 보장	법인부정	인간의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과실 손해배상	상호주의	법인긍정	국민의 권리

II. 내용

1.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1)요건(아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청구권적 기본권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법률용어 - 면소]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경우에 내려진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면소의 대상) ①범죄후에 법령이 바뀌어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폐지 되었을 때 ②해당 범죄(자)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③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을 경우

[법률용어 - 공소기각]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이 있을 때에 법원이 이를 이유로 하여 실체적 심리에 들어감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

공소기각에는 판결로써 해야 하는 경우(327조)와 결정으로써 해야 하는 경우(328조)의 2가지가 있음.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제329조(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이다.

결정으로써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경우는,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제12조(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 때이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실체적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소송조건이 흠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절차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정본(正本)은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①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또한 같다.

(3)내용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③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⑤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한다.

⑦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2.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終局的)인 처분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피의자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심의회의 관할·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제4항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결 또는 판결에 따른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때를 말한다)된 후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3. 명예회복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한다)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 의의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2. 요건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내용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서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구조금액) ①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長)의 증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4. 절차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본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제27조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3. 14.>

⑥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6조(구조결정)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으면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

③ 본부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구조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그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⑤ 본부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할 수 있다.

제28조(긴급구조금의 지급 등) ① 지구심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구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을 지급한다.

④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긴급구조금으로 지급된 금액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한다.

⑤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지구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소멸시효)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모두 고생 많았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주에 만나요.